

강주호 “교실 CCTV 설치법안 반대·교원 실질적 보호 우선”

(한국교총 회장)

하늘이법, 교사 교육활동 위축시켜 교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보호 학급 학생 수 상한 등 과제 제시도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40대 회장이 교실 CCTV 설치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사고 책임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바비엔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를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 회장은 ▲학생 안전 및 교사 보호 담보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폐지 ▲악성 민원 및 무분별 신고 관련 교원 보호 후속 입법 ▲학교 내 CCTV 설치법안 반대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등을 골자로 입장을 밝혔다.

◆학교 내 CCTV 설치, “학생·교사 인권 침해”

지난달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CCTV를 설치하는 내



강주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이 20일 오전 10시 서울 바비엔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를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

용을 담아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하늘이법’을 두고 “학교가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헌법이 보장한 존엄과 인권, 초상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을 교원에게서 앗아가는 법안”이라며 “교실 CCTV 설치법안은 분명히 반대하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으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불안감도 여전히 높다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총이 요구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담보 못하면 중단해야”

학생 사고 책임 관련으로 초등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교사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당연퇴직형(금고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교사 한 명이 수십 명 학생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오롯이 교사에게 책임만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려 하겠느냐”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의 행정업무 분리도 촉구했다.

이밖에 강 회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교원 정치기본권 및 공무담임권 확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입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교사 81.8%,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 85.6% “CCTV 설치법안 반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총이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에게 실시한 주요 교육현안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80.9%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2.5%)고 부정 응답했다. 올해 6월부터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면 교원이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도 72.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1.5%)고 응답했다.

올해 선생님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연간계획대로 가기로 했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다. 반면 ▲보류취소(21.8%) ▲축소시행(15.2%) ▲미정(11.3%) 응답도 절반 가까이나 돼 현장의 위축된 분위기를 드러냈다.

교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85.6%에 달했다. 반대 이유는 기본권 침해(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서울 전역으로 확대

미취학 아동 시간제 보육 서비스 내달 1일부터 9곳 추가 지정 연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병원 진료 등 급한 일이 생겼을 때나 운동 등 재충전 시간이 필요할 때 한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양육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9곳을 추가로 지정해 17개소로 확대하고, 연내 25개 전 자치구별 1개소씩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중·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다. 월 6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부터 8개 어린이집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이달 기준 지금까지 총 3177건, 1만3009시간의 이용실적을 기록했으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4월부터 신규로 운영하는 9개소는 ▲중구 신당동어린이집 ▲용산구 효창어린이집 ▲강북구 꿈나무어린이집 ▲노원구 향기어린이집 ▲서대문구 마미어린이집 ▲양천구 흥익어린이집 ▲강서구 구립숲속나라어린이집 ▲구로구 새

날어린이집 ▲동작구 구립고은어린이집이다.

신규 운영 어린이집은 4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21일부터 ‘서울시보육포털’에서 예약가능 하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2000원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유연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육아는 부모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지원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체감도 높은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쪽방 주민에 제철 식재료 제공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 시범운영 하이트진로 정기후원으로 진행

서울시가 쪽방 주민들에게 제철 식재료 ‘꾸러미’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19일부터 서울역 쪽방촌 온기창고에서 ‘비타민 프로젝트’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하이트진로 정기후원으로 진행되는 온기창고 지원사업으로, 이날 비타민 꾸러미 250개를 시작으로 4월부터는 매달 700개씩 전달될 예정이다.

‘온기창고’는 기존에 선착순, 줄서기 방식으로 이뤄졌던 쪽방촌 후원 물품 배부 방식에서 벗어나 쪽방 주민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가져가는 서울시 운영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90%가 1인가구인



서울시가 19일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에게 신선 제철을 제공하는 ‘비타민 프로젝트’ 전달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정충현 서울시 복지기획관, 하이트진로 정세영 상무, 서울역쪽방상담소 유호연 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데다 취사 시설 등이 마땅치 않아 제철 식품을 섭취하기 어려운 쪽방 주민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해 온 하이트진로의 후원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번달 ‘비타민 꾸러미’에는 사과·한라봉 1개씩과 냉이, 대파, 감자, 양파 등 7000원 상당 식품이 들었다. /이현진 기자

정원감축·통폐합 대학에 예산 추가배정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해당 대학 유연한 사업비 운용 지원

교육부가 정원 감축, 대학 통폐합 등 구조개선을 한 대학에 별도의 예산을 추가 배정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전공 학과를 확대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넓힌 대학에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공립대·국립대법인)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 지속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됐다.

2025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138곳, 전문대학 118곳으로, 총사업비는 대학과 전문대가 각각 7955억원, 5555억원이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전체 국립대학 37곳을 대상으로 4243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최대

30%(기존 25%)로 상향해 해당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계 추진목표를 25%로 유지한다. 다만 가산점은 수도권대는 10점에서 15점, 국립대는 8점에서 12점으로 확대해 대학 참여를 유도한다.

정원감축, 대학 통폐합 등 구조개선 대학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여건 및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학사운영 및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등 일반대학에 300억원, 전문대학에 2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상수도 인프라 확충·현대화 추진

배수지 신·증설, 스마트 관리 시스템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인프라 확충과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인구 유입 증가에 대비해 배수지 신·증설 및 송배수관 확충, 노후 상수도관 개량 및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 우수율 개선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당 재개발 추진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에 대비해 덕양구 주교동에 위치한 주교배수지를 증설한다. 현재

2800㎡ 규모인 배수지를 4400㎡ 추가 확장하는 공사를 오는 6월 착공해, 2027년까지 총 7200㎡의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일산 서구 대화동에 걸친 지역에는 1만㎡ 용량의 신규 배수지를 신설한다. 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수율(수돗물 손실률) 개선과 체계적인 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국비 112억 원을 포함해 총 241억 원을 투입, 급수지역별 상수도 블록을 구축하고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있다. /고양(경기)=만성기 기자 ask9990@